

“우리 정치의 수치”...“정쟁 사안 아니다”

‘더민주 초선 의원 사드 방중’ 여야 공방 확산

6명 오늘 김포공항 출국...경제제재 등 자제 요청 방침 김종인 “이용 당하지나 않았으면...”당내 비판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방중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여야간 입장 차이는 물론 더민주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중국 방문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더민주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 등 6명은 8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 베이징에서 2박 3일간 머문 뒤 오는 10일 귀국한다.

이들은 북경대 교수들과 판구연구소 관계자들, 현지 교민과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의 면담도 예정되었다. 이들은 사드 관련 중국 현지 여론을 살피고 중국 내 전문가들에게는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 경제제재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더민주 의원 6명이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정치권에서 국가와 국민 안위를 위해 정부와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섯 분의 방중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방중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서 “우리 정치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당대표 선거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사드 반대하는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무슨 정부 여당 일을 대신한다는 것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대표

도 같은 날 경남 산청군에서 열린 지역당 원과의 간담회에서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중국에 가려는 6명을 설득해 가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방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중을 계획하고 있는 의원들은 자신들이 사드 반대론자로 규정되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6명 중 손혜원·소병훈 의원만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을 뿐 나머지 4명은 사드 배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 자체에 관해선 반대의견을 공개

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이번 방중에 공세를 퍼자 더민주에선 ‘경북 성주군 배치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성주 내 배치 장소 이동 발언 논란 등으로 공지에 돌린 새누리당이 방중을 발미로 반격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서 정쟁으로 몰고 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의 야당 비판은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장소 이전 발언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통한 곳으로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당대표 경선 사전투표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7일,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장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당 대표 경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영란법 시행 시기 유예 안된다”

정부입법정책협...국회농수산위는 적용 금액 상향 결의안

정부는 지난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제처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6개 부처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는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28일)이 확정되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

협의회의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을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추경안 협상 헛바퀴...12일 처리 불투명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헛바퀴만 돌면서 애초 합의했던 오는 12일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제도 개선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놓고 정면대립한 때문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까닭은 야권 3당이 내건 8가지 합의 사항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국민의당은 서별관 회의의 청문회 개최를 추경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으로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이고 구조조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졸속심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국민혈세 1조4000억원이 조신 해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당연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는 감시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야 할 것”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사드 배치 발표 한달...안팎 반발에 후속 작업 올스톱

SOFA 회의 일정도 못잡아

내년 연말 운용 늦어질 수도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내외 반발 속에 후속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로부터 닷새가 지난 지난달 13일 경북 성주를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한미는 당초 부지 발표 직후 SOFA(주

한미군지위협정)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성주 방공기지를 미군 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7일 현재까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성주 군민들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우려 등으로 강력히 반발하면서 후속조치에 나설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성주 군민 설득 방안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성주 군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

다면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포대 주둔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 발언 직후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내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성주는 물론 한 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군 안팎에선 주민 반발로 내년 연말까지 사드를 운용한다는 계획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작업이 주민 반발로 ‘올스톱’된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연합뉴스

‘이정현 선두’ 1면에서 계속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는 7일 전국 2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선거인단 투표는 총 34만 7500여명 중 대의원 9000여명을 제외한 33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 9000여명의 대의원들은 오는 9일 전당대회 당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봉인됐으며 전당대회 당일에 개봉된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날 이정현 후보는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절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어제 유세 때까지 그것을 지켰다”며 “말로만 경과 청산을 외치면서 상대 후보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은 뒤 나중에 화합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더민주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참여 당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린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실천과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더민주 광주시당 선관위는 7일 담화문을 통해 “선거는 대의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이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권을 행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당 선관위는 “후보자도 흑색선전 같은 흠집내기식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6년 만에 시행하는 위원장 경선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자리매

김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장 선거가 정제된 시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4·13 총선 과정에서 흐트러진 당성을 추스르고 우리 당이 시민의 주목을 받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이형석(기호 1) 복구를 지역위원장과 최영호(기호 2) 남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져 지역위원장 대 지치단체장 구도도 치러지게 됐다. 시당위원장은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권리당원 ARS(50%) 결과와 대의원 현장투표(50%)를 통해 선출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